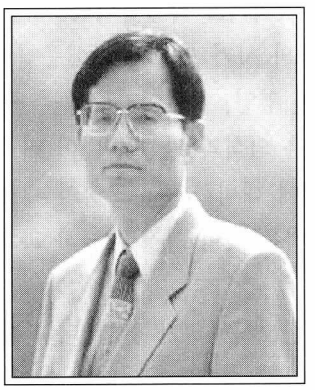
특집3

산업안전 효율 극대화를 위한 안전기관의 역할분담



김 용 수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1. 서 론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하나이며 사망 재해율이나 손실비용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비해 약 3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재해율은 안전인들의 노력에 의해 점점 낮아지고 있어 1%미만으로 줄어드는데 성공하였으나 아직도, 중대 재해 및 경제손실에 대해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하여 보면 98년도에 산재보상 대상사업장의 근로자수 7,582,479명중에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자가 51,514명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7조2천5백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영세 및 중소업체(300인 미만)에서 86%에 해당하는 44,285명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곧 우리 나라의 재해감소와 직결될 수 있다.

중 · 소 사업장의 산재예방 활동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또한, 현재 산재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여 역할분담을 찾아 산재예방 및 경제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우리 나라의 재해예방기관 및 단체

우리 나라의 재해예방기관은 정부의 통일된 정책이나 부서가 없어, 다원화되어 있고 법률 역시 개별법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에 대한 기업체에서는 불편함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한 이에 편승하여 정부에서도 경제논리적 측면으로만 안전법을 수차례 규제 완화를 실시하고 있어 안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전투에서 무장 해제를 당한 군인」과 같이 어떻게 활동을 하여야 할지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대한 의견도 많이 도출되었으나 우리 나라는 미국의 OSHA나 영국의 HSE와 같은 종합적인 정부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선진 외국의 산업안전 정책을 우리의 실정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곧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앞을 보듯 당연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노동부에서 관할하는 기관들에 한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노동부에는 산업안전국 내에 안전정책과, 산업안전과, 위생과, 보건과, 건설안전팀으로 구성되었고 각 지방사무소에 산업안전과가 설치되어 있어 행정의 지도체제는 어느 정도 이루워졌다고 하겠다.

그러나 인원확충, 질적 수준은 앞으로도 더욱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고 예방단체 기관이나 안전보건 기술인들과 협조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앞서가는 안전보건 예방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로는 현재 우리 나라의 예방단체인 기구의 역할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비능률적인 현실속에서는 우리 나라의 안전보건 예방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해예방단체는 정부의 투자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있고 사단법인인 단체로 대한산업안전협회, 보건협회가 있으며 재단법인으로는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 등 21개 인가단체가 있어 제 각각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전국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단체도 있다.

또한 개인별로 설립된 안전 예방기구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 단체들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느냐에 따라 저비용으로 고효율은 낼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진다고 사료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체가 모두 중요하고 제 역할이 다른 것과 같이 오른손이 큰 역할을 한다고, 왼손이 없이 오른손이 둘이 된다면 기형이 되는 것과 같이, 같은 업무를 두 기관 또는 그 이상의 기관에서 행할 때 여러 가지로 사업장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중복된 예방기관에서는 서로가 어렵게 되며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활동은 퇴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기관의 업무내용이 특색을 갖고 서로가 중복되지 않게 보완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정리한다면,

첫째로, 노동부는 안전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고 각 단체의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로, 공단의 역할은 안전기술개발 및 정보제공과 안전성평가와 외국과의 경쟁력있는 안전보건 표준화 체계 등을 보급하고 국민들을 계몽하며 안전보건단체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개발을 하여 관련 단체에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로, 각 단체는 제 각각 특성에 맞는 업무내용으로 질적 향상과 선진 측정장비를 보유하는 등 각 단체의 요건에 변화가 있어야 하고 또한 같은 업무라 하더라도 규모별 산업분야별로 나뉘어서 안전활동을 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안전공단에서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단에서 할 일을 과감하게 각 단체에 위임하고, 각 단체에서 하던 일들을 정비하여 자율안전에 맡겨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검사 업무의 단일 체제이다.

어느 단체에서 지도한 사업장의 검사 업무를 상위 단체에서 이중으로 검사하는 것은 사업장의 어려움과 아울러 지도방법의 혼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그러므로, 진단 및 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신속하고 간편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검사자의 책임이 뒷받침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자율안전이 방임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영세업체에서 안전에 대한 기술 부족 및 전담 인력부족을 덜기 위한 정부에서 안전관리 대행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업무분담 역할 부족으로 인해, 수혜 대상 사

업장에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국고 지원 수수료를 최고 하한가 제도에서 한 단계 높여 적정가 제도로 개편함이 타당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행기관은 능력 차등화와 업무분석 평가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동종 업종재해 방지를 위해 영세사업장의 지원방법을 더 한층 강구하여 지원하되 이 또한 지도를 한 단체가 책임지도 체제로 되어야 한다.

예로 안전협회가 지도한 사업장이라면 협회의 추천에 의해 산업재해 예방시설자금 융자제도에서 혜택을 주어 근원적인 시설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체계화 시켜야한다. 각 재해예방 단체에서도 앞으로 국제인증(ISO)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여 사업장 욕구에 충족하고 또한 국제 수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3. 안전기술 및 연구활동의 공유화

안전기술 및 연구활동이 공단이나 각 기관별로 또는 학교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장이나 정부정책에 반영이 미진하면 안된다.

정부나 공단에서는 현재 정보제공을 여러 형태로 보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안전기술 등을 공유하면 각 단체들에 중복되는 애로 사항의 해결이나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영국에서도 HSE가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연구를 하여 정책수행에 반영하고 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이를 유용한 자료 혹은 소재로 제공해 준다. HSE는 공동연구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어 대부분 연구가 공동형태로 추진되고 이에 따라 연구재원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도 크다. 그러므로 중요사항에 관한 관련업체 및 협회 등의 참여율이 높게 된다.

우리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연구들을 통한 산업위험에 대해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 안전보건에 대한 규제 사항을 제정한다면 보다 나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당위성이 이루어져 규제 완화시에 문제발생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 그리고 안전협회가 지도하는 사업장에도 큰 성과가 있게 되리라 본다.

4. 맺은말

현재 산업체에서는 안전보건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안전보건 기술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재해빈도율로나 중대재해자수 및 손실비용을 볼 때 아직도 우리는 해야할 일이 많다고 여겨진다.

첫째로, 안전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 평범한 진리인 질서규범을 안전문화로의 연결이 필요하다.

둘째로, 안전규정이 사업장에 더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제정되고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각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로, 각 단체별로 직무와 수준의 단계를 차등화 한다면 서로가 보완적이고 업무의 효율을 가져오며 각 사업장의 불편을 제거하는 역할이 되리라 본다.

이와 같은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안전공단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며 또한 각 단체들의 역할 향상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하겠다. 가장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가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외에도 많은 제도 보완 사항들이 하루 빨리 개선되고, 인간존중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단체별 기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길 기대한다.